



국방개혁 2.0: 평가와 대안  
'종전선언' 의미와 북한의 숨은 의도  
군인과 국가





### 표지설명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출처 : Wikimedia Commons



ISSN 2586-6354

발행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인	오창환
편집위원장	이윤규
편집위원	윤여인, 허남성, 김열수, 이준희, 윤석준, 윤준호
창간일	2018년 3월 1일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 국방문화연구센터 10층
전화	031-727-8101
팩스	031-727-8112
홈페이지	www.kima.re.kr
이메일	kimapao@kima.re.kr
디자인·인쇄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월간 KIMA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사진·삽화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2018. 9 Vol.7



## 군사·안보 이슈

- 04 국방개혁 2.0: 평가와 대안 | 김열수
- 05 '종전선언' 의미와 북한의 숨은 의도 | 이준희
- 06 군인과 국가 | 허남성

## KIMA Forum

- 07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대비전략

## KIMA 군사논단

- 14 중국 지상군 무기가 인기있는 이유

## Global Military News in August, 2018

- 16 3D Printer와 군사 분야 적용 사례 외
- 17 미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주요 내용 요약 외
- 18 일본 수륙기동단 현황과 미·일 군사협력 외
- 19 미 국방성 『2018년도 중국군 보고서』 요약 외
- 20 『2018년 환태평양훈련(RIMPAC)』 함의 외
- 21 미국 주요 군지휘관 교체 및 지명 현황 외
- 22 미 육군 미래사령부 창설 목적, 분야 및 방향 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식

- 23 KIMA-KB국민은행 기부금 기탁식  
‘자랑스러운 예비역’을 찾습니다!  
세계 군사동향 전문지 『KIMA군사논단』 발간
- 24 2018 하반기 한국군사 논문 공모

16



21





# 국방개혁 2.0: 평가와 대안



김열수 \_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국방개혁 2.0 수립시 고려요소와 목표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발표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1.0으로 보고 이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2.0으로 명명되었다. 사실 거의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이 새로이 발표되다시피 했다. 국방개혁법에 2~3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두 번이나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도 한 번 발표했다. 즉, 노무현 정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5번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쟁양상 및 국방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국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국방개혁 2.0은 군사적 위협, 잠재적 위협,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및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고려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전쟁 양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등 국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 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목표를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및 디지털 강군 육성’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육성’ 등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목표의 자구(wording)는 다소 유동적이다.

## 국방개혁 수립시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한국의 국방개혁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정권별로 변덕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3가지이다. 우선, 위협에 대한 평가가 미래 중심적이기보다는 과거 중심적이었고, 전체적이기보다는 사건 중심적인 경향이 있었다. 위협이 다르게 평가되다 보니 전력 구조 등 군구조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방환경의 대외적 변수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정되었다. 전환 시기가 확정-연기-조건에 의한 전환 등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연합지휘구조 등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의 증감이라는 국방환경의 대내적 변수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정되었다. 정권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4~8%로써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목표연도가 2020에서 2030으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행히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 국방개혁 2.0 추진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전작권 전환시 신연합사령부의 지휘구조는 대충 열개가 짜진 것으로 보이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신연합사령부로의 지휘구조 변경과 함께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에서 직접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할 필요가 있다. 합동군 사령부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이것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를 보좌할 제1차장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의 상부지휘구조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로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투수행 능력과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군 총장을 군령 계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권별 국방개혁안은 모두 양적인 군대를 질적인 군대로 개혁하고자 했다.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전력은 증강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선(先) 전력 증강, 후(後) 병력 감축’의 원칙이 천명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해진 시점에 부대는 해체되는데 전력 증강은 한 없이 늘여지고 있다.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시간대로 부대만 해체된다면 군의 임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은 이번 정부를 끝으로 종식되기를 바란다. 국방개혁과 국방정책의 차별성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군도, 정부도, 국민도 국방개혁에 대한 피로증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만 개혁실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2~3년 단위로 개혁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개혁의 대상은 소수의 구체적인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KIMA

# ‘중전선언’ 의미와 북한의 숨은 의도



이준희 \_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전선언의 의미

중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 상징적 행위이다. 따라서 ‘중전선언’은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행위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남북 경제협력보다도 ‘중전선언’이 먼저라며 추후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중전선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중전선언’을 서두르는 숨은 의도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숨은 의도

첫째, 북한의 ‘중전선언’ 주장은 대남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은 중전선언이 “미국의 마땅한 의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장기적인 대남 전략목표인 유엔군 사령부 해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이다. 막상 ‘중전선언’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북핵폐기 논의와 함께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요구는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한 · 미동맹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보여주기 유화책으로 중전선언을 종용하고 비핵화 추진 의지를 무산시키려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현황, 핵시설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는 미진한 채 미국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을 우선 실행함으로써 비핵화 속도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자국송환(5.10),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폐기(5.6~12),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송환(8.2)이 그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완전한 비핵화(CVID) 추진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중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6.12)이 임박했을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CVID)가 지금 당장 될 것처럼 호언장담 했었지만, 결국 트럼프 임기(2021년)내에 실현하는 것으로 지연되고 말았다.

셋째, 중국이 ‘중전선언’에 적극 개입하여 미 · 중 무역 분쟁의

해법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김정을 3차례나 만나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경제 사정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북한을 지렛대 삼아 중국이 한반도 권력 다툼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은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찬성하면서 관련 당사국으로 참여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북한비핵화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북한비핵화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제기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것은 김영철 북한노동당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핵화 협상은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판 날수 있다(may fall apart).”는 호전적 내용의 서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중국이 대북압박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추진 속도를 높게 만들므로써 ‘중전선언’을 위한 성숙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맺음말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필요 · 충분조건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설블리 ‘중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군사 · 안보적으로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보여주기식 비핵화 쇼에 현혹되어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제출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 않은 상황 하에서 설익은 평화론에 근거하여 ‘중전선언’을 하게 한다면 안보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중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는 단 0.1%의 자만이나 허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완전한 비핵화(CVID) 구현 등의 필요충분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중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KIMA

# 군인과 국가



허남성 \_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 전쟁과 군인

필자는 교실에서 자주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한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전쟁을 하는가?”, “군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필자의 답은 이렇다. 우선, 인간들은 ‘더 나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 ‘더 나은 평화’란 구체적으로 ‘나에게 더 유리한 평화’를 의미한다. 즉, 인간은 현재보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평화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폭력’을 써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클라우제비츠도 “전쟁이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질문인 ‘군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은 이렇하다. “군인은 싸우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되고 무기·장비가 잘 갖추어진 충분한 숫자의 군인들이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가 감히 덤벼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인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즉 싸우지 않기 위해 존재하며, ‘전쟁의 예방’이야말로 군대가 존재하는 최우선적 이유이다. 따라서 전쟁의 예방에 실패한 군대는 그 첫 번째 임무에서 실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군인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 침략자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 헌팅턴의 「군인과 국가」

「문명의 충돌」을 쓴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박사의 첫 번째 저서가 민군관계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이다. 어쩌서 그는 책 제목을 「군과 국가」(The Military and the State)라고 하지 않았을까? 군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제도나 기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제도나 기구의 주체로서 지능과 감정을 지닌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그의 의도가 느껴진다. 국토 및 국민(몸)과 주권(영혼)으로 구성되는 국가(state)를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의인화(擬人化)하여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soldier)의 대칭점에 둬으로써, 민군관계에 생동감이 부여됐다. 이로써 민군관계란 단순히 문관에 의한 무관의 통제라는

오도된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주체로서의 국민이 군인(무관)을 통제한다는 올바른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군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민군관계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 본질이다.

## 군사직업의 전문성

본래 직업(profession)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것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high calling)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직업으로서의 항속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일정하고도 독특한 전문성(expertise)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쟁은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 하면서도, 그것과 직접 연관된 군사전문 직업이 정식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들어와서부터이다. 물론 로마시대 당시 유명했던 마리우스(Gaius Marius; BC 157-86) 집정관의 군사개혁이 정착되기 시작한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군 병사들에게는 직업군인적 색채가 두드러졌고, 중세 이후 유럽에 직업적 용병제도가 성행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전문가인 장교의 전문직업화는 이상하리만큼 뒤늦은 시기인 19세기에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군사 업무는 주로 군주와 귀족들의 소관이었는데,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보다 더 큰 권리를 누렸던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부과된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과 연이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말미암아 장교는 신분의 상징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었다.

오늘날 직업 군인은 부사관 직종까지 분화하여 정립되었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비록 병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병사들은 과거의 귀족들에게 부과되었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병역은 ‘신성한 임무’인 것이다. 그래서 지원병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도 장교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군사 근무를 ‘명예로운 경력’으로 대우해주고 있다. 제대로 전통이 잡힌 선진국일수록 공직과 사회 전 분야는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군인을 ‘특별 대우’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군사문화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요원할 따름이다. **KIMA**



2018-6차 KIMA Forum

# 한반도 종전선언 · 평화협정 전망과 대비전략



## 포럼 참석

**주 관** 오창환 예)중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발 표** 홍관희 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간 사** 이윤규 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  
**참 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로/전문연구위원, 예비역,  
 국방부·합참 실무관 등 48명

**토 론**  
 김영호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재천 박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경섭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준구 박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교수

주 제 발 표



홍 관 희 박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행위,  
평화협정은 의무준수의  
공식적인 협정  
”

“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남·북·미·중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  
”

“  
종전선언은 '준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음  
”

한반도 안보의 판도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요 현안으로 등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판도라 상자'라 일컬어질 만큼 그 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수'를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란

'종전(終戰)선언'은 평화협정에 앞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행위이고, '평화협정'은 “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명시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평화협정에 기초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게 된다. '평화체제'란 평화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에 기초하여 법적·제도적으로 평화가 보장됨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 상태인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작업'으로서 ① 종전, ② 평화협정, ③ 군비통제·군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 논의의 부상과 전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선언에서 '新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4·27판문점선언에서 2018년 내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기로 남북이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협정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매우 조급해 하는 모습에서 대남전략이 변치 않았으며, 현 안보정세 혼란 상황을 대남혁명전략 목적을 위해 적극 이용하려는 저의를 읽을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시기상조이며,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① 쌍중단(韓·美 훈련과 핵개발 동시 중단)과 ②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종전선언의 성격과 안보적 함의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전쟁의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전쟁 종료'가 선언된 이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다룸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남북이 합의해야 되고, 美·中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남북 합의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선언의 국제법적 함의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서 '준(準)평화협정'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종전선언의 문제점과 위험성 -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에 준하는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의사(疑似)(가짜) 평화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북한 비핵화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으며 안보 차



“ 비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 모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

“ ‘평화협정’의 신뢰구축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

원에서 부적절하다. 종전선언 채택 시 ① 韓·美 연합훈련이 영구 중단 또는 폐지될 가능성 ② 주한 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점 ③ 북한을 적(敵)으로 가정한 모든 현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됨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④ NLL 소멸 가능성 ⑤ 국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

**평화협정의 성격과 기본 전제**

일반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구축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대방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아울러 힘의 균형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건 남북 간 또는 韓·美와 北·中 간 실질적인 군사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韓·美 연합방위체제의 억제력을 변함없이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은 韓·美의 완벽한 조율과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이 추진되면 ① UN사령부 해체 우려, ②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③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우선순위 문제가 대두, ④ NLL 무실화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평화협정 사례와 교훈**

**첫째,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1919.6.28.)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한 전쟁 승리에 따른 전쟁 종결 이후, 파리에서 연합국(미·영·프)과 독일 간 체결됐다. 이 평화협정 특징은 승패의 확정과 힘에 의한 전쟁 종결 및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승패가 나지 않은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상호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난관과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북한의 핵위협 제거(비핵화)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둘째, 로카르노 조약(1925.10)이다.** 독일·프랑스 및 독일·벨기에 간 체결되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를 보장한 ‘강대국에 의한 국제적 평화조약’ 성격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1936년 독일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으며, 1939년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하였고, 1940년 독일은 벨기에와 프랑스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강대국에 의한 국제보장 체제라는 점에서, 現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2+2: 남북+美中)에 합의를 줄 수 있으나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뮌헨 협정(1938.9)이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총리가 독일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하여,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보장받았다고 환호하였으나, 1년 후인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발발했다. 오늘날 뮌헨 협정은 유화정책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직한 실수”, “겁먹고 가치 없는 행동”,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유화정책의 비극”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독재국가와 타협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내의 평화 분위기 특히 ‘전쟁은 없다’는 허상 인식이 자칫 북한에 유리한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넷째, 독·소 불가침조약(1939.8.23.)이다.** 2차 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8월 모스크바에서 독일 외상 리벤토르프와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몰로토프가 조인한 상호불가침조약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상호 불침략 ② 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제3국

“ 평화협정 사례 교훈으로 ①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허상에 불과하다 ② 단순히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이상적 시도로 간주하면 큰 오판이 될 수 있다 ”

- ③ 파리평화협정은 내부 단합과 국방태세 확립 및 韓·美 동맹 강화만이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 ④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힘의 공백지대화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에 대한 원조 불가 ③ 상호 분쟁의 평화적 처리 등이다.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독·소 불가침조약은 파기됐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남북한 정권 및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이상적 시도로 간주하면 큰 오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베트남 전쟁 종식 파리평화협정(1973.1.27.)은 미국·北베트남·南베트남·베트콩(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등 4개국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다. 협정 체결 이후 北베트남에 의한 협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마침내 1975년 4월 北베트남의 전면 무력 침공으로 南베트남은 멸망했다. 베트남의 공산 통일 이후, 北베트남의 공산통일에 적극 협조했던 南베트남 출신 좌익 인사들도 불신당하고 점진적으로 ‘소리 없이’ 소멸·말살당했다. 특히 南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가진 ‘제3세력’도 ‘한번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간들은 또 배신한다’며 처형됨. 이른바 ‘제3세력’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 정당, 종교단체, 카톨릭교도, 불교도 등 종교인들도 무력통일 후 재교육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처벌됐다. 결국 베트남 평화협정은 베트남의 평화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南베트남의 몰락을 초래하고 미군 철수를 정당화 해주는 구실이 되었다. 파리평화협정은 내부 단합과 국방태세 확립 및 韓·美 동맹 강화만이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여섯째, 남북 예멘 간 통일협정 및 통일선언(1992.4~5)이다. 남북 예멘은 1989년 12월 1일 136개조의 통일헌법 초안을 공포하였으며, 1990년 1~3월 중 2차례의 공동각료회의를 통해 정부기구의 조정과 통합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30개월의 과도 기간 중 통일체제 조직과 헌법 개정 등에 관해 양측 간 이견이 노정되고, 특히 정치지도자들 간 권력 안배와 정국 주도를 놓고 투쟁이 격화돼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여 南예멘군은 1990년 5월 이전의 분리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무력 충돌에 들어감으로써 수많은 인명 살상과 사회 질서 및 시설의 파괴로 인해 21세기 최악의 비극적 사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힘의 공백지대화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러·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韓·美 동맹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

현재 한반도에서는 南·北·中 3자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美國이 홀로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 2가지 시나리오는 하나는 北의 先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실현 불가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韓美동맹과 中國견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 종전선언·평화협정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하나는 北의 (위장) ‘비핵화’ 의사 표명으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다. 북한이 살라미 전술 및 아부 외교 등의 일환으로 미국에 단계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실제로는 핵보유 견지), 한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비핵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현 상황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비핵화 실현이 확실해 보이면, ‘평화협정 체결→미군철수’ 빅딜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경우, 한반도는 베트남 평화협정 유사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 “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① 北의 先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실현 불가이다
- ② 北의 (위장) ‘비핵화’ 의사 표명으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다
- ”

“

한반도 정세는

- ① 북한 비핵화 거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② 美·中 패권쟁투 격화되고 있다
- ③ 韓·美 동맹 균열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대비 전략으로는

- ①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의 보류
- ② 국가안보·국방태세의 확립
- ③ 韓·美 동맹의 복원·강화
- ④ 통일은 현실적으로, '자유민주' 통일 원칙 견지

”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비 전략**

최근 한반도 정세는 ① 북한 비핵화 거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② 美·中 패권쟁투 격화되고 있으며, ③ 韓·美 동맹 균열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비 전략으로는 첫째,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의 보류이다. 北 비핵화가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필수조건이므로 北의 '형식적 비핵화'가 아닌, CVID·FFID 수준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은 자칫 한국만 돌이킬 수 없는(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전략적 패착과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가안보·국방태세의 확립이다. 우리 국방의 핵심 축인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더욱 발전·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북한 핵보유를 전제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 위협 당사자로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 준비 대안'을 유지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핵·민방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韓·美 동맹의 복원·강화이다. 韓·美 간 제재·압박 공조를 복원·강화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 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韓·美 방위비 분담금(약 1조원 규모) 협상에서 '美 전략자산 비용(작전지원비 항목)포함 문제를 둘러싼 양국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은 현실적으로, '자유민주' 통일 원칙 견지되어야 한다. 남북 화해·합의 통일은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난망한 상황이다. 남북 간 이념과 체제의 상극인 북한의 주체·金家 세습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통일에 앞선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군사력(핵·미사일) 증강을 저지하면서, 국내 안보의식을 강화하여 내부 단결을 기하고, 북한정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역사의 섭리를 활용할 때 통일은 실현될 것이다.

**토론**



**김영호** 박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호**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에는 '평화 무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업고 북한은 종전선언 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민족공조론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입만 열면 내세우는 선전문구였다. 민족공조는 바로 국제공조노선에서 이탈하여 반미노선(反美路線)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과연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은 세력균형과 역지력에 의해서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모두 깨치고 전쟁으로 비호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는 유지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홍 현 익 박사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한반도에 평화질서가 구축되려면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쟁 이외의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유도가 어려우므로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주고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얻는 방법이 2018년에 시도되고 있다. 즉 종전선언을 첫걸음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동시 병행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것은 향후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소멸되고 유엔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이 동시에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무작정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북한에게 전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머지않아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여타 호혜적인 경협사업들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성의 표시에 일단 제재를 완화해 주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가돼 북한이 불성실한 행동을 하면 또 다시 제재를 복귀시키는 Snap-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김 재 천 박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천** 북한의 정상들의 합의문에 의거해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인 종전선언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첫째, 9월 5일 방북하는 대북 특사단은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적어도 ‘핵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 정도와 맞교환 할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물론 동시행동을 한다고 해도 선·후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핵 신고와 핵물질 생산 중단’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이 선행될 경우 종전선언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러나 이 정도의 합의에 만족할 수 없음. 종전선언과 핵 신고 (및 핵물질 생산 중단)와 맞교환에 합의하더라도 향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과 시간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북한이 향후에도 살라미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체제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핵화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당사국들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핵화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신뢰구축이 어렵고, 평화협정의 비준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어 합의를 보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 경 섭 박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경섭**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출발한다. 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비핵화를 설득할 명분이 있다고 본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낙관적이다.

그러나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주장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국정부가 북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면, 치명적인 안보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비판적이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논쟁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러한 길을 선택했다면, 비핵화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부수적인 과제들일 뿐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요구한다면, 비핵화 의지만 의심받을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유 준 구 박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교수

**유준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 체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평화협정의 체결 형식 및 방향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중시하고 중국 역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에 개입할 수 있는 바,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협정 체결의 한 방식으로서, 남북과 북·미를 포함한 4대국을 당사자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각론적으로 북·미 또는 남북 평화협정을 맺는 2중적 체결방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평화협정 체결 시 고려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상호체제 인정·존중 및 파괴·전복활동 중단 합의의 이행·실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의 국제적 선언과 구체적인 검증 합의 및 단계적 실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DMZ의 평화적 이용 등), △불가침 합의의 이행,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운영,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실시, △당국 간 회담의 제도화·정례화, △통신·통행·통상 등 인적 교류의 제도화,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전제조건은 남북한 및 주변국 입장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틀에서는 비핵화, 적대행위중지, 체제보장의 세 가지이다. **KIMA**

# 중국 지상군 무기가 인기있는 이유



윤석준 \_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최근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특별논단을 통해 중국 지상군 무기의 해외수출 현황과 수입국의 반응을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세계 무기판매시장 비율은 불과 6.2%로 판매액이 21억 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놀랍게도 수입국으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의 지상군 무기 판매대상은 주전차(MBT), 무장전투차량(AFV/IFV), 자주포차량(SH), 다연장로켓차량(MRL), HQ-계열 FD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이며, 주요 대상국은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중동 및 중앙아 지역 내 국가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연안국, 동유럽 발칸반도 및 중남미 국가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사실 중국 지상군 무기 해외 판매 규모는 공식적인 재래식 무기 해외판매 통계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국영 방산기업들의 폐쇄적 재무구조를 고려할시 중국의 지상군 무기 해외판매는 공개된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망은 그간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중국 지상군 무기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동안 중국 지상군 무기는 성능이 낮고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며 대부분이 구소련 역설계 모방형 또는 러시아의 2류급 군사과학기술을 사용한 복사판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오관'이었다. 최근까지 중국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수출한 지상군 무기들은 과거 구소련 모방형인 T형 MBT, B형 AFV/IFV가 아닌, 대부분 수입 대상국의 전장상황과 전투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생산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실 지상전 무기는 비싼 첨단화 및 무인화보다 전장상황과 전투환경에 대한 적용성(availability)이 중요하다. 특히 내전, 주변국과의 국지적 분쟁 그리고 정권장악 경쟁 상황 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중국 지상전 무기는 매력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인 전쟁보다 내부 반군 세력의 내란 또는 주변국과의 국지전 등의 상황에 대비한 값싼 지상군 무기를 원한다. 심지어 최근 미국도 전투상황에 맞는 전력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국조차도 너무 값비싼 미래 전력에 매진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제30대 미 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 조나던 그리넷 제독이 당시 값비싼 스텔스 전력보다 무장탑재가 많은 전력을 선호한다는 논지를 미 해군연구소(USNI) 프로시딩스(Proceedings) 잡지에 주장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이미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은 이점을 인지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상위급 수준과 하위급 수준 사이의 중간 수준의 무기 시장 틈새를 파고들어 맞춤형 무기들을 해외에 내놓고 있었다. 대표적 중국 방위산업체는 NORINCO, Poly Technologie, CASIC, CALMI, CPMIE, SCAIC, CTIC, TSVM이다. 이들은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동유럽 및 발칸반도 국가들이 원하는 무기소요와 구매력 간 조화를 이루는 다음과 같은 지상전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 1. 독자형 제품번호 사용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와 서구의 제품 번호인 M계열, T계열과 B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독자형 제품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T-90과 유사한 VT계열 MBT, 미 육군 Bradley와 유사한 VT AFV, 미 육군 Hamvee와 유사한 VN계열 IFV/APC, 미 육군 M109 Paladin 자주포를 모방한 PLZ계열 자주포, 러시아 S-400 및 미 육군 Patriot과 경쟁하는 FD계열 대공방어체계 등이다. 특히 VT-5 AFV는 20톤 내외의 중량으로 저렴한 105mm 주포와 5,000m 사거리의 홍지안 73(紅箭: Red Arrow 73)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케냐와 베네주엘라에서 인기대상이며, PLZ-45 155mm 자주포는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알제리에서 인기 종목이다.

## 2. 수요국 맞춤형 생산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의 지상전 무기들은 경쟁적으로 자동화된 원격조정의 무장과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운용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지식이 없이 운용하면 고장이 잦다. 그러나 중국 지상전 무기는 비교적 단순하고 수동이며, 무리한 장거리 타격보다 근거리 전투제압을 원하는 수입국의 전장여건과 구매력에 맞추고 있다. 즉 선진국이 지향하는 전통적 전력-대-전력 국면의 사양(specification)이 아닌, 반군, 테러분자, 반정부 세력 진압 등의 국내 소요 진압에 적합토록 생산하며 합동성(jointness)도 필요치 않아 무장이 단순하다. 특히 미 육군 Stryker AFV를 모방한 PolyTechnologies사의 4×4 또는 6×6 VN계열 AFV와 미 육군 Hamvee와 유사한 CTIC사 동풍맹스(東風猛士) EQ2050 차량은 경쟁 제품보다 연료 소비가 1/3이면서 최대속력은 시속 200km까지 가능하다. 2017년에 베네주엘라에만 165대를 수출하였으며, 케냐 국립경찰에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 3. 가격경쟁력

대부분 중국제 장비와 무기체계는 모듈식 부품이 아닌 기계식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며 특히 고장시 부품 교체와 수리가 용이하다. 선진국 제품들은 고급 강철과 무인형 체계를 사용하나, 중국은 내구성을 더 중시하며 고장시 부품과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호한다.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난다. 실제 태국이 2017년에 외부장관 보호제를 사용한 VT-4 2000계열 MBT 10대를 5,800만 불에 구매하였으며, 이는 대당 가격이 58만 불로 대당 890만 불인 미 육군 M1A1 Abrams보다 17배나 싼 가격이었다. 비록 광학사격자동장치, GPS 주행 등에 있어 비교적 낮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나, 상대하는 적이 열세한 반군, 테러집단 등이어서 가격 대비 100%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의 연계성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지상군 무기 해외판매 대상국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즉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으로의 전환이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무기구매 금지 제재를 받은 국가에게 중국 지상군 무기는 좋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CASIC과 CALMI사의 HQ계열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는 미국과 유럽의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 중동 카타르, 유럽 터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로메니스탄과 아프리카 알제리 등에게 좋은 대안이다. 또한 사거리 400km의 400mm 탄도 미사일 케니스터를 이용한 SY-400, HQ-9 수출용 FD-2000, HQ-16 수출용 LY-80 미사일을 탑재한 8×8 Weishi(衛士)계열 차량과 CASIC의 KS-1000과 CALMI의 FB-1000은 러시아 2K22 Tunguska와 유사성 의심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알제리, 파키스탄, 투루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인기가 있다.

### 5. 과감한 방산협력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기술이전에 소극적이거나, 중국은 해당 국가의 독자적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 제공, 군사과학기술 이수, 노하우 전수 그리고 제작 경험을 주저없이 약속하는 등의 과감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태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의 국가들은 주변국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고자 자국 방위산업 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바,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자국 방산진흥 정책을 이용하여 각종 군사과학기술 이전 등의 제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게는 중국 지상군 무기는 거부할 수 없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11월에 터키가 독자형 Kasirga MBRI를 탑재할 차량으로 중국 8×8 Weishi 차량과 TSVM사의 TA580 차량 제조기술과 부품을 이전받아 T-300 다연장로켓체계를 완성한 사례였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 지상전 무기의 해외판

매 간 연계는 2013년 9월에 터키가 미국 패트리엇(Patriot),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SAMP/T 그리고 러시아 S-300 대공방어체계를 제치고 중국 CPMIEC사의 HQ-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FD-2000 대공방어체계 구매를 선언한 사례에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40~50억 불보다 낮은 34억 불로 명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부수장비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NATO의 항의와 2016년 미국 주도의 군부 정변 실패 등으로 결국 터키는 중국산 구매를 취소하고 러시아 S-400 구매로 바꾸었다. 그래도 중국은 터키로 인해 CPMIEC사의 HQ-9 미사일 FD-2000에 대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이제 중국 방산업체들의 판촉전략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비록 선진국들이 고부가가치의 함정, 잠수함, 항공기, 전차와 무장 전투차량 등에 있어 중국보다 앞서 있으나, 중국은 수입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독자적인 맞춤형 지상전 무기를 제작하여 영리하게 전략적 판촉전을 실시하며 틈새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1~2017년 간 미얀마와 베네수엘라에만 447대의 지상군 VN계열의 AFV를 수출하였으며, 파키스탄엔 VT계열의 MBT-2000 주전차 325대를 수출한 실적이었다.

특히 이러한 중국 지상전 무기는 인기가 있다. 예를 들면 중동 카타르(Qatar)의 중국제 단거리 지대공 탄도 미사일 수입과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서부 사하라 사막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WZ계열 AFV/IFV 수입은 국내 내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집권에 성공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모잠비크, 남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및 태국 등이다.

이제 중국은 과거와 같이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마구잡이식의 모방형 지상전 무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던 양상이 아니라, 독자형을 판매하는 양상을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방위산업체가 지상전 무기 판매 대금으로 천연가스와 가공된 농산물과 수산물로 받아들였던 사례를 들어 중국의 세계 재래식 무기 시장 점유율을 저평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 국가로 부상하며,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세계 재래식 무기시장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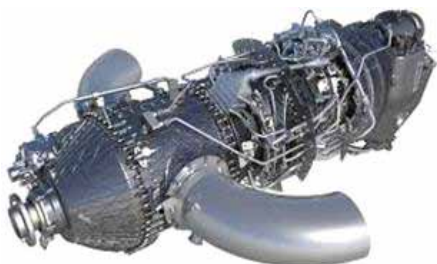
현재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의 지상전 무기 해외판매 전략은 재평가 받아야 할 시기이다. 특히 2017년 1월에 시진핑 주석이 '군민일체화', 2015년 5월의 '중국제조 2025' 그리고 '2025년 혁신'을 통해 중국 국영 방산업체의 체질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목표는 미국 내 세계 우수급 방산업체들이다. 물론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지상전 무기 해외판매 실적을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국영 방산업체의 체질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영 방산업체의 체질 개선을 통해 향후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경쟁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KIMA**

# Global Military News

## KIMA Newsletter 구독 안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시사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군사 이슈를 다룬 『KIMA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방부·합참, 예비역, 정치·외교·국방·군사학 교수, 안보·국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KIMA Newsletter』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ma.re.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ima20298)로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하며, 이메일/BAND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홍보실(☎031-727-8101, kimapao@kima.re.kr)로 문의바랍니다.



『GE Aviation's Advanced Turboprop Engine』  
출처 Google 이미지

## 3D Printer와 군사 분야 적용 사례

지난 7월호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3D Printer 기술 사례가 어떻게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보도하였다. 우선 방위산업체의 시제품 생산이다. 다음으로 민간 항공기 엔진 개발과 부품 생산이다. 실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가 자사 브랜드의 터보프롭(turboprop) 엔진을 3D Printer로 생산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미 공군이 3D Printer 활용에 적극적이다. 이 미 공군은 『부품수명주기 관리 센터(Air Force Life Cycle Management Center: AFLCMC)』 주도하에 3D Printer를 이용한 미 공군 엔진 교체 부품 생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신뢰성, 인증, 생산 효과, 3D Printer 역효과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3D Printer의 군사 분야 적용은 주로 항공기와 우주 로켓 엔진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2021년에 이르면 항공 엔진 부품의 75%가 3D Printer에 의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hina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fifth test of its DF-ZF/DF-17 hypersonic glide vehicle from the Wuzhai missile test range in northern China's Shanxi province on Aug. 19, reports the Washington Free Beacon』  
출처 Google 이미지

## 미·러·중·인도의 HGV 개발 현황과 함의

지난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 8월호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인도가 극초음속 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를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HGV가 이들 4개국 간 차세대 무기 경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HGV 개발에 뛰어 들었다면서 HGV가 국가 간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보유하게 되면 군사대국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HGV 개발을 하는 원인은 상대국이 구축한 기존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Scramjets 추진체 개발에 필요한 군사과학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탄도 미사일이 주로 육상기지 지하 사일로(Silo)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상대국 또는 경쟁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전략적 이점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HGV 개발이 경쟁국과의 대결구도를 일시에 역전시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인도는 HGV를 육상기지에 고정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하여 상대방 또는 경쟁국이 사전 탐지를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대응을 못하도록 하여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는 기존의 미국과 러시아 간 경쟁에서 중국과 인도가 뛰어들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HGV 기술이 일부 불량국가로 확산되는 경우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US Congress buildings in Washington, D.C. USA』  
출처 US Congress Homepage

### 미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주요 내용 요약

지난 7월 26일에 미 의회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The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을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2018년에 이어 미군의 근무 여건, 전투 능력 및 전비태세를 증강하며, 이를 통해 2018년 미 국방 전략서(NDS)에 언급된 미래 잠재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장비 및 무기체계 구매에 6,390억불, 해외우발군사작전(OCO)에 690억불 그리고 추가로 80억불을 배정하여 총 7,160억불을 2019년 국방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2018년에 이은 2년 연속 증가편성이다. 특히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downsize)할 수 없으며, 비핵화의 토의 대상(non-negotiable)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력이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시 정체(停滯)되어 있었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첨단 군사력 재건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미 군사력 재건계획으로 볼 수 있다.



『MQ-9B SkyGuardian UAV in Historic Transatlantic Flight』  
출처 Google 이미지

### 영국 공군 SkyGuardian UAV의 대서양 횡단 비행 함의

지난 7월 11일에 영국 공군이 미 GA-ASI사로부터 도입한 중고도 장거리(MALE) MQ-9B형 SkyGuardian 무인기(UAV)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비행을 하였다. 지난 7월 10일에 MQ-9B형 SkyGuardian UAV는 미국 노스 다코다주 그랜드 포크스에 위치한 GA-ASI사의 무인기 비행시험장을 이륙하여, 7월 11일에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으며, 당시 횡단비행에 소비된 연료는 탑재연료의 60% 수준이었다. 영국 공군의 원격 무인기 비행체계(RPAS)에 의한 이번 MQ-9B형 SkyGuardian UAV의 대서양 횡단비행은 NATO 회원국의 민간 공역(civilian airspace) 내 무인기 운용성, NATO가 설정한 공중 지속력(airworthiness) 표준 적합성, 대서양 대잠전(ASW) 활용성 그리고 인공위성통신(SATCOM)에 의한 원격 이착륙체계 적용성을 시험하는 목적하에 공개적으로 실시되었다. 영국 공군은 향후 미 GA-ASI사로부터 “PROTECTOR Mk 1”의 독자 모델로 대량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영국 공군은 이번 대서양 횡단비행 시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365일 24시간 UAV RPAS 개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Artisit Illustration of China's Hypersonic HGV』  
출처 www.Armystar.com 이미지

### 중국의 싱쿱(星空)-2호 HGV 개발 현황

지난 8월 4일에 중국 군사 온라인 매체인 『신량권스망(新量軍事網)』은 “중국항천과기 집단유한공사(中國航天科技集團有限公司: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소속 공기동력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HGV) ‘싱쿱(星空)-2호’가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량권스망은 “지난 8월 3일 오전 6시 41분에 싱쿱-2 HGV가 우주로켓에 탑재되어 고도 30km 상공까지 상승한 후 우주로켓으로부터 분리되어 마하 5.5~6 속도로 6분 동안 자력비행 및 타격체 돌입비행 과정을 거쳐 목표지역에 안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HGV는 우주공간에서 로켓 본체에서 분리되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행 탄도 미사일 방어(MD) 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러시아 및 중국 간 기존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탐지하지 못하는 마하 25 속도의 HGV 개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앞서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로 HGV 개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First Japanese Amphibious Combat Unit Activated Since WWII Welcomed by U.S. Marines』  
출처 Google 이미지

### 일본 수륙기동단 현황과 미·일 군사협력

지난 8월 6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3월에 창설한 일본 육상자위대(육자대) 소속 수륙기동단을 곧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臺) 열도 주변 지역에 전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 육자대 수륙기동단은 ‘일본판 해병대’로 알려져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자대 내의 최초의 상륙작전 부대로서 최근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이 악화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육자대 일부 여단 병력을 활용하여 창설하였다. 이번 창설된 수륙기동단은 총 2,100명 병력 규모로 수륙양용 장갑차 AAV7, 수직이착륙 오스프리(Osprey), 기동헬기 등을 보유하며, 주로 오스미(Osumi)급 상륙함, 후루가(Hyuga)급 및 이즈모(Izumo) 헬기 구축함(실체는 헬기항공모함임)에 탑재하여 수평(상륙함)/수직(항공기)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수륙기동단을 위해 30억불의 예산을 배정해 2021년까지 17대의 미 Bell-Boeing사 수직이착륙 오스프리를 구매할 계획으로 현재 1차분 4대가 인도되었다. 그 동안 일본은 평화헌법(Peace Constitution)에 의해 전수방어(傳守防禦) 전략을 수행해 왔으나, 중국의 해양팽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점차 공세적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US Army Stryker JIFV with SHORAD』  
출처 Google 이미지

### 미 육군 전투차량 SHORAD 탑재계획

지난 7월 18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미 육군성이 2020년까지 미 육군 전투차량에 단거리 대공방어체계(SHORAD)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 육군 야전 지휘관들은 적(敵)과 국제테러조직이 소형 미사일, 낮은 고도에서 돌진하는 민용 소형 헬기 및 항공기, 무인기(UAV)를 동원해 전투차량을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SHORAD 체계를 요구해 왔었다. 지금까지는 전투차량과 SHORAD 체계는 일체화(一體化)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기술적, 작전운용 상에 문제가 많았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미 육군 야전 지휘관들은 AN/TWQ-1 아벤저(Avenger) 또는 FIM-92 스팅거(Stinger) 단거리 미사일을 전투차량에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팔레스타인 Izzedine al-Qassam 테러세력이 이란으로부터 40~60km 사거리의 Qassam-A 장거리 로켓(LRR)을 제공받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미 육군 지상작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다.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미 육군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장거리 로켓 그리고 무인기 등의 위협에 대해 각각 대응하는 별도의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향후는 SHORAD 체계로 표준화시켜 전투차량 생존성을 높이고 지상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Y-9 ready for combat missions after completing drills in South China Sea』  
출처 Google 이미지

### 중국 Y-9기의 KADIZ 5번째 무단 진입 의미

지난 8월 29일에 중국해군 Y(運)-9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은 다섯번째 무단 진입으로 우리 공군은 F-15K 등 10여대를 긴급출격시켜 경고방송 등 전술적 조치를 하였으나, 중국 항공기는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이 한반도 주변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과시하고 장거리 정찰 비행을 주변국에 알릴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군의 군사굴기(軍事崛起)는 양(量)보다는 질(質)이며, 이를 위해 중국군은 주변국의 각종 군사장비와 무기체계의 신호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중국해군 Y-9 KADIZ 진입은 Key Resolve, Foal Eagle 등의 연합훈련에 집중되었으나, 올해와 같이 자주 무단 진입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궁극적으로 이제는 중국군의 신호정보 수집 범위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General Song Puxuan, commander of the Chinese PLA NTC, met with Marine Corps General Joseph Dunford, 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at a combined army brigade under the PLA NTC on August 16, 2017』  
출처 Google 이미지

**미 국방성 『2018년도 중국군 보고서』 요약**

지난 8월 16일에 미 국방성은 『2018년도 중국군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를 공개하였다. 이는 미 국방성이 『2000년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따라 중국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군사과학기술 개발 현황, 군조직 개편, 작전개념 발전 및 우주 및 사이버 공격 등 중국군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하는 문건이다. 이번 보고서는 요약문과 전년 대비 중국 국가전략 발전, 중국군(PLA) 발전현황, 군현대화 목표와 현황, 국방비 현황, 대만사태 대비 군사력 증강, 미·중 군사협력 현황 등 6개 장(章)과 중국군의 글로벌 영향력, 중국의 북한정책과 전략, 중국군 합동작전 능력, 전략폭격기 작전 범위, 시진핑의 군사혁신전략 등 5개 특별주제(special topic)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비교, 미·중 군사교류협력 현황, 약어집 등 3개 부록서(appendix)로 구성된 총 145쪽 분량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부전구(北部戰區)사령부(NTC) 동향을 포함시켜 유사시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임무는 난민유입 저지, 북·중 국경통제 그리고 대(對)북한 군사개입으로 보았다. 특히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3개 집단군(78·79·80軍) 약 17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엔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훈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궁극적으로 미 국방성은 미국과 동등한 경쟁자로 부상하려는 중국군의 미 본토 공격 징후를 억제하고, 동아시아 지역내의 동맹국과 파트너ship 국가를 보호할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변영, 안정과 자유를 견지하기 위해 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혁신시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HMS Queen Elizabeth departs for the USA to land fast jets on deck for the very first time』  
출처 Government of Defence United Kingdom Homepage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 F-35B 탑재 시험**

지난 8월 13일에 영국 국방성은 “영국 해군의 퀸엘리자베스(HMS Queen Elizabeth) 항모에 F-35B 함재기 탑재를 위한 전술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최대 크기의 함정인 퀸엘리자베스 항모가 왜 스키점프(ski-jump) 방식을 채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비용절감, 항모전투단 임무를 단순화하여 이착륙 소요 감소, 스키점프 방식으로 함수 공간 활용도를 확장시켰으며, 스키점프 각도를 14도까지 높였다. 최초 설계시는 12도였으나, F-35B 이륙시의 양력을 높이기 위해 각도를 14도까지 올렸으며, 이에 따라 F-35B의 연료소비가 적게 들어 작전시간이 늘게 되었다. 향후 영국 해군은 이번 퀸엘리자베스 항모와 F-35B 간 해상 수직 이착륙(V/STOL) 시험을 약 113주에 걸쳐 대서양, 지중해 그리고 중동에서 5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Image picture of Secretary Mike Pompeo to address the Indo-Pacific Economic Strategy on July 30, 2018』  
출처 Google 이미지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전략』 선언**

지난 7월 30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전략(Indo-Pacific Economic Strategy)』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열린 구상(Free & Open Indo-Pacific Initiative)’ 선언, 지난 5월 30일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로 개칭한 조치에 이은 세번째 미 인도-태평양 전략 계획이다. 특히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을 그 동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맞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과학기술, 에너지 개발 그리고 기반시설 증축을 위해 1억 1,300만 불의 착수금을 투자하며, 이후 중국과 달리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로서의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 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주변국 및 인도양 연안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위협 수준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번 인도-태평양 경제전략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국가들에게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Republic of Korea Navy Task Force leaving for RIMPAC 2018』  
출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mepage

### 『2018년 환태평양훈련(RIMPAC)』 합의

2018년도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 RIMPAC)』에 참가했던 한국 림팩훈련전대가 지난 8월 20일에 제주 해군기지에 복귀하였다. 이번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의 림팩훈련전대 규모는 DDG 이지스급 구축함, DDH-Ⅱ 구축함, 장보고-Ⅰ급 잠수함 각 1척과 P-3C 1대, 해상작전헬기 2대, UDT/SEAL 2개 팀과 해병대 1개 소대 등 710여 명이 참가하였다. 1971년부터 시작된 림팩훈련에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참가하였으며, 이번 2018년 훈련에는 총 25개국에서 약 50척의 함정과 잠수함, 200대의 항공기와 25,000명이 참가하였고, 특히 훈련 기간 중 한국 해군 림팩훈련전대장이 미 해군 항모강습단(CSG) 호위전대(EF)의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장보고-Ⅰ급 잠수함은 홍군과 청군으로 구성된 대잠전(ASW) 자유공방전에서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가상 적함 12척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올려 미 해군 제3함대 사령관 존 알렉산더(Vice Admiral John Alexander) 해군중장의 격찬을 받았다. 향후 매 2년마다 미 해군 주관으로 개최되는 림팩훈련은 동아시아 지역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다국적 해군 간 연합훈련에서 지상군과 공군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first work session of the Northern Atlantic Council at the NATO Summit, July 11, 2018』  
출처 Google 이미지

### 미 트럼프 이후 세계안정과 질서 모색

지난 8월 4일~10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열린 미래(Open Future)’라는 기획특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안 및 무질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범과 원칙에 의한 세계 안정과 질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기여와 경제적 희생을 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구축되어 온 각종 규범(regime)과 원칙(rule)이 깨지는 무질서(disorder)가 확산되고 있고, 그 동안 어렵게 이룩한 각종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합의와 이행과제들이 무력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지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에 몰입되었던 미국 내의 연구기관의 논지와 여러 국가들이 주도한 각종 규범과 원칙들이 효율성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역효과를 걸러내자는 의도”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접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미국의 새로운 역할 모색,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는 국제질서 유지, 다자주의 정신 복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들 국가와 단체가 세계 정치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해 일단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트럼프 이후 새롭게 적용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움직임이라면서 이들의 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South Korea's chief delegate Major General Kim Do-gyun (R) shaking hands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An Ik San (L) during their high-level military talks in Panmunjom, June 14, 2018.』  
출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okbang Ilbo Homepage

### 북한의 종전 주장과 북한이 해야 할 과제

지난 8월 12일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미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6·25전쟁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핵무기와 생산시설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 신고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에 예정된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였다. 6·25전쟁 종전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비핵화, 상호 적성(敵性)이 없는 상황이 전제되면서, 북한이 6·25 전쟁 후유증을 극복하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하며, 당시 서명국 보다 남북한 간 문제에 지향해야 한다. 지난 65년간 지속된 정전의 후유증은 민족분단, 경제분단, 사회분단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남북한 공동 생존을 위해 직접 당사국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정전문서 서명을 들어 현재 직접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만을 직접 상대하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제3자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현재는 6·25 전쟁 종전의 직접 당사자 간 비핵화,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과제 실행을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로서 북한은 여기에 다른 목적을 두면 안된다.





『A unified combatant command (UCC) is 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command that is composed of forces from at least two Military Departments and has a broad and continuing mission.』  
출처 Government of Defence United Kingdom Homepage

### 미국 주요 군지휘관 교체 및 지명 현황

지난 8월 1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군지휘관을 대폭 교체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군사전략 의중과 군사작전 개념을 암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주요 대상은 미 합참의장과 차장, 중동과 아프칸을 담당하는 중부사령관, 유럽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 최고사령관, 미 특수작전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아프칸 주둔군 사령관 등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교체이다. 지난 1월 4일에 미 8군사령관에 마이클 빌스(Micheal A. Bills) 육군중장이, 7월 30일에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캐나다 웨인 에리(Wayne Eyre) 육군중장이 보직되었으며, 8월 27일에는 미 7공군사령관 토머스 버거슨(Thomas W. Bergeson) 공군중장 후임으로 케네스 월즈바흐(Kenneth S. Wilsbach)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 예하 알래스카 지역사령관이 임명되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의 전투력을 소홀히 했다는 인식 하에 우주군 창설을 강행하고 사이버사령부를 기능 전투사령부(FCC)가 아닌, 통합 전투사령부(UCC)로 승격하여 국가안전국(NSA) 통제를 받지 않게 하는 등 미군 전투력 향상에 방점을 두고 주요 전투지휘관을 보직시키고 있다.



『Vice Adm. Andrew “Woody” Lewis address guest as he assumes command of U.S. 2nd Fleet aboard the nuclear aircraft carrier USS George H.W. Bush (CVN 77).』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USA

### 미 해군 대서양 제2함대 창설 및 함의

지난 8월 24일에 대서양 노퍽(Norfolk) 해군기지에 입항한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CVN-77) 함상에서 미 해군 참모총장 리차드 조나던(Admiral John Richardson) 해군대장 참석 하에 미 해군 제2함대 창설식이 거행되었으며, 초대 사령관에는 미 해군 항공병과 제독 앤드류 루이스(Vice Admiral Andrew Lewis) 해군중장이 임명되었다. 미 해군 제2함대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전략서(NDS) 기조에 따라 그 동안 대서양에서의 마약, 밀입국, 테러 등의 비(非)군사적 위협만이 아닌, 러시아 등의 경쟁국으로부터의 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이다. 현재 제2함대는 항모타격단(CSG)-2 및 원정타격단(ESG)-2로 편성되었으며, 예하부대로 수상함, 정찰, 상륙, 군수지원, 대잠전, 기뢰전 및 훈련전단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2함대 창설은 러시아 해군이 대서양과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더불어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북극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함으로써 해양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U.S. Army’s MRZR-4 LTATV can carry up to four personnel with equipped logistic things in rear area.』  
출처 Google 이미지

### 미 특수전사령부의 LTATV 개발 현황

지난 6월호 『제인국제방산리뷰(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는 “미 특수전사령부(USSOCOM)는 Polaris Government and Defense사가 민용기술(COST)을 접목하여 개발한 ‘전술용 다목적차량(MRZR LTATV)’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 특수전사령부 이외에 육군특수부대, 해군 SEAL팀 그리고 공군 특수작전부대도 험피(HMMWV) 보다 MRZR LTATV 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Polaris Government and Defense사는 2인용과 4인용 MRZR LTATV로 각각 다르게 생산하고 있으며, 장차 무인화도 추진 중이다. 주요 제원은 경무장에 글로벌 밴드 위성통신체계(BGAN) C4ISR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4인용 MRZR LTATV의 경우 길이 3.6m, 폭 1.53m와 넓이 1.87m의 크기에 개방형 철관 외형으로 중량을 크게 줄여 특수작전용 HC-130 Combat King 수송기, CV-22 수직이착륙 오스프리(Osprey)기 그리고 H-47와 H-53 헬기에 탑재할 수 있어 특수작전지역에 대한 공중 낙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MRZR-LTATV 엔진은 초경량 ProStar 900 4-stroke DOHC 디젤로 최대 100km/h 속도로 기동하며 4인용 기준으로 1,500 파운드 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향후 Polaris Government and Defense사는 MRZR-X형 LTATV-UGV를 미 육군의 제82 또는 제101 공병부대에 투입하여 작전성능 시험평가 과정을 거칠 것이며, 미 국방성에 의해 정식 무인화 지상장비로 채택되면, 미 육군의 다목적 무인차량(SMET)와 함께 지상전 무인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Bird Eye view on city of Austin, Texas, USA』  
출처 Google 이미지

### 미 육군 미래사령부 창설 목적, 분야 및 방향

지난 8월 24일에 미 육군 미래사령부 본부 개소식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었다. 통상 미 육군 부대는 도시가 아닌 시골 교외에 설치되는데, 이번 미래사령부 본부는 미국의 제2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로 알려진 텍사스 오스틴 도시 한 가운데에 설치하였다. 주된 이유는 민간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 민-군 겸용(dual-used)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의도였다. 초대 사령관은 미 육군 본부 획득, 군수 및 과학기술 참모부장(G-8)과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군사지휘관을 역임한 존 무레이(General John Murray) 육군대장이 임명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창설된 미래사령부가 혁신적 개념, 목적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장기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향후 5년 이내에 미 육군의 새로운 전투력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민용 과학기술과 접목시키는 것이다. 통상 미래전력 개발은 5~10년을 예상하였다. 궁극적으로 미 육군은 2003년에서 2009년에 진행된 미래전투체계(FCS) 개발이 더딘 의사결정(unrealistic processes) 절차, 수확 내용(harvestable content) 확인 과정 미흡 및 군사과학기술 도래 주기에 맞추기 위한 대기 등으로 적용 시기를 놓쳤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미래사령부 운영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미래전투력(do-able future system)을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IHS Jane's Markit Ltd is a global information provider based on London, United Kindgom』  
출처 Google 이미지

### 동아시아 무인무기체계(UWS) 미래소요 전망

지난 8월 31일, 영국 『IHS 제인국방연구원(IHS Jane's Markit)』 주관 하에 『동아시아 방산수출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세미나가 한국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국방비 증가추세, 무인무기체계(UWS) 개발 및 지상/공중/해양 무인기 현황 그리고 중국 세계 무기시장 점유 확장 추세에 대해 4개 발표주제에 대해 전문 연구원들의 발표가 있었다. 2027년까지의 동아시아 무인무기체계 시장 소요는 약 301억 불 수준이며, 매년 12%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중국 시장 소요가 약 65.7%에 이르고, 이어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이 뒤따르고 있다. 2017년까지 동아시아 12개 국가 중에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 4개국의 무인무기체계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며, 2027년까지 이들 4개 국가의 소요는 중국이 131억불로 44%, 인도가 62억불로 21%, 한국이 41억불로 14% 그리고 일본이 38억불로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 등 서구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인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27년에 이르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가 생산한 독자형 무인무기체계가 동아시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icrowaves can be used to inflict horrifying brain injuries and destroy victims' eardrums』  
출처 Google 이미지

### 미 해외 외교관에 대한 마이크로웨이브 공격

지난 9월 3일자 미 뉴욕타임스(NYT)지는 “최근 중국과 쿠바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원인모를 청각과 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미 국가안보국(NSA)이 국무성 그리고 연방수사국(FBI)과 공동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2016년 말부터 쿠바 하노바에 근무하는 약 24~30명의 주쿠바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원인모를 청각 장애와 뇌에 이상증상이 나타나서 본국으로 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미 국가안보국이 구성한 미 의학전문가팀이 진찰과 치료 및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주중국 광저우(廣州)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 11명에게서 쿠바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현상의 청각 장애와 뇌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본국으로 와서 미 국가안보국의 미 의학전문가팀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소위 『프레이 효과(Fray effect)』에 의한 인위적 피해로 판정되고 있다. 즉, 방송, 통신, 전자레인지 등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인체에 무해(無害)한 것이 아니고, 청각 장애와 환각 현상, 두통 그리고 심지어 뇌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며, 작년 10월에는 미국 주재 쿠바 외교관을 미국 국가안보에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하였으며, 중국을 미국의 미래 동등한 경쟁자로 직접 지목하는 등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미 외교관에 대한 마이크로웨이브 공격은 향후 미국과 양국 간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징후들이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식



## KIMA-KB국민은행 기부금 기탁식

KIMA는 지난 3월 20일 KB국민은행 강동·송파지역영업본부(이하 KB)와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KB의 기부금 기탁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며,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2번째 기부이다. 이번 기부금은 총 1,000만원이며, KIMA는 고유 목적사업인 국방·군사 연구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부금에 대한 활용실적은 KIM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년 국방부에 정기보고하는 등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계 군사동향 전문지 『KIMA군사논단』 발간

KIMA는 세계 주요국의 군사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사전문지인 『KIMA군사논단』을 정식 발간하기로 했다. 최근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기존 세계질서의 변화로 전 세계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KIMA군사논단은 군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역·예비역 및 군사학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KIMA 오창환 원장은 “군사논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독자들에게 세계적인 군사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A군사논단은 군사적 이슈에 따라 발간하는 비정기간행물이며, KIMA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구독가능하다.

한편, 2016년부터 발간한 군사전문 일간지 『KIMA뉴스레터』는 현재 3,000여 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구독문의 : ☎ 031-727-8101, e-mail : kimapao@kima.re.kr



## 제2회 「자랑스러운 예비역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대상

장기간 군에 헌신하고 전역후 군과 예비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교육, 연구, 또는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존경받는 예비역

### 추천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추천 가능(추천서 양식 및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내용 기술후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선발방법 및 인원

심의위원회(외부인사 포함)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  
※도덕성, 인성, 부정·부패분야 노출시 결격사유로 선발에서 제외

### 세부일정

추천서 접수 : 2018년 9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E-mail로 접수  
심의 / 발표 : 2018년 10월 10일 ~ 24일 / 10월 25일(개인통보)  
포상(상금, 부상) : 2018년 11월 1일

### 보내는곳 / 문의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 국방문화연구센터 1010호  
문의 : 예비역지원실(031-727-8122, yunbosg@hanmail.net)  
홈페이지 :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 2018 하반기 『한국군사』 논문 공모 안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 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8년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외교·안보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된 기관입니다.

『한국군사』는 군사 분야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군사학 관련 전문가 (예비역, 현역, 교수, 연구원, 학생)

## 논문 공모분야

- 국방 / 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 군사전략 / 군사사 / 군사사상
- 무기체계 및 장비 / 방위산업 전반
- 안보 및 국방 분야와 관련한 정치 / 외교
- 세계 여러 국가의 국방정책 / 군사문제
- 군사과학 및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응용
- 기타 군사학 관련 주제

## 일 정

구 분	공고/논문접수	논문심사	발 간
일 정	2018.10.31한	11월 중	12월 중

## 시상안내

구 분	최우수	우수(2편)	장려(3편)
상 금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 수상논문은 『한국군사』에 게재, 기타 참여한 논문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논문 작성 / 제출 방법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 연구원 홈페이지(www.kima.re.kr) 원고 양식 참고
-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이용 및 제출 ※ 연구원 홈페이지(www.kima.re.kr) 온라인 투고 시스템 사용방법 참조

**접수 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문의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 031-727-8116)